

원주공항 9월부터 증편 운항 기대

황 총리 규제개혁 점검회의

야간까지 운영시간 연장 밝혀
제주노선 증편 등 활성화 전망
“평창올림픽도 세심하게 준비”

원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연장돼 강원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원주공항 민간항공기의 야간운항이 가능하도록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운영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운영시간이 바뀌면 원주-제주 노선의 증편을 통한 도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황 총리는 이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강당에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안보와 지역 발전이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하겠다”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세심하게 준비해 강원도가 겨울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는 산지가 82%, 그중 92%가 규제 대상이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가 도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철원군 95%, 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22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려 황교안 총리가 최문순 지사의 제안을 경청하고 있다. 원주=오윤석기자

천·고성군 6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관광 등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151km에 이르는 동해안 철책이 과감하게 해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 확대, 국유립 광구 내 토석 분류 기준 및 감정 평

가 개선,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 규제 합리화, 민통선 복상 및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회의에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제정부 법제처장, 유무영 식약처장, 신원섭 산림청장,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위원장, 중

리실 실무진 등과 배진환 행정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정원길 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이미경 CU편의점 대표, 신유근 영월이앤에스 대표, 김철귀 청성애원 대표, 천세복 강원도관광협회장, 김찬용 강촌레일파크대표,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위원 등이 참석했다. 원주=유학렬기자 hyoo@

“동해안 철책 150km 올림픽 투자 걸림돌”

황 총리 규제개혁 점검회의

22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접경지역과 군사 관련 규제 완화를 주문하는 건의가 잇따랐다.

최문순 지사는 “풍광이 좋은 동해안 150여km에 철책이 쳐져 있어 외자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투자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 문제가 해소되면 투자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과감하고 신속한 완화를 촉구했다.

지역 현장 규제 예로 청취에서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연구위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영농활동 불편 완화와 국비가 투입된 안보관광시설 활용 등을 위해 현재 군사분계선이 남 10km인 민간통제선(민통선)을 5km 북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또 민간인들이 밀집해 경제활동을 하는 접경지역 도시지역 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 (주)현대전기 원영표 대표이사도 군부대와의 협의를 철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접경지역 제한보호구역의 협의위탁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22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려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문순 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주=오윤석기자

‘철책 철거·민통선 북상’ 건의 정부 인허가 간주제 대폭 확대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 기대

역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허가나 신고제 업무와 관련해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민원업무 5,077건 가운데 인허가나 신고 관련 민원업무가 39.4%(2,003건)에 달한다.

또 주요 인허가나 신고제 유형을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91만8,000건, 산지전용 허가·신고 2만1,000건, 건축물 허가 20만건, 공장 건축허가 1만8,000건,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2만1,000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4,600건 등이다.

정부는 이번엔 우선적으로 인허가 제도 101건, 신고제도 100건 등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201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62개 업무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민박사업과 같이 행정관청이 신고 서류를 수리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곧바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석만기자

1조 6000억대 동해항 3단계 개발 '첫 삽'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항만개발 계획 확정 후 5년만에 첫 삽을 뜬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오후 3시 30분 오전 둔치에서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간다.

3단계 개발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조 6224억원(국비 8568억원, 민자 7658억원)을 투입해 방파제 1.85km, 방파호안 2.3km 등 기반시설

개발 계획 확정 5년만에 오늘 오전 둔치서 기공식

을 조성한다. 또 최대 10만t급 규모의 부두 7곳을 확충하고 접안시설과 임항 교통시설, 친수시설을 설치한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북방파제 1.7km는 23일

기공식 이후 공사에 들어가게 되며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두개 구간으로 나눠 건설한다.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2200만인 하역 능력이 4100만으로증가하고 접안능력도 16척에서 23척으로 개선, 환동해권 물류 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번 공사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는 3

조 834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336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평식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동해항을 환동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며 "선박 체선율을 낮추고 항만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해/홍성배 sbhong@xado.net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22일 오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원도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의료기기·접경지역 규제 개혁”

■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황교안 총리, 애로사항 청취
최문순 지사, 규제완화 요청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원주를 방문해 강원도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와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방안, 구조조정 업종 손톱 밑 가시 개선활동, 기업 기술 규제 애로해소 등의 정부 규제개혁 안도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도내 기업체 대표들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품목 범위 확대, 원주공항

운영시간 연장, 민통선의 부분 복상 조정, 접경지역 도시지역 내 제한보호구역 해제,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원주시도 옛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등의 지역 현안사항을 전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규제개혁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의료기기 규제 완화는 물론 안보와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92%가 규제로 묶여 있고 동해안 철조망 등 광범위한 군사보호시설로 지역발전이 어려움이 있다"며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외국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관심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

현장점검회의에는 황인무 국방부차관, 이준원 농식품부차관, 최정호 국토부2차관, 제정부 법제처장, 유무영 식약처장, 신원섭 산림청장,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 원창목 원주시장, 정완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주/윤수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 필요

“물품분야 지역할당 적용해야”

건설공사 도내업체 49% 참여 전기자재 등 물품 법 적용 제외 영세업체 낙찰기회 낮아 불만

■ 동계올림픽 경기장 전기 관급자재 입찰 공고 현황

분야	가격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관급자재 (수배전반)	9억7300만원
하키 경기장 전기관급자재 (수배전반)	9억5500만원
컬빙 경기장 전기관급자재 (수배전반)	7억5800만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성 사업과 관련, 물품 등도 지역할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도와 도내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계특별법)'에 따라 공사비의 70~75%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여기에 강원도는 동계특별법에 따

라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사에 도 업체들이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올림픽 경기장 조성사업에 도내 업체들이 최대 49%의 지분을 갖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의 경우, 동계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최근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공사 전기관급자재(수배전반) 물품

을 전국입찰로 공고했으며 이달 말 개찰된다.

물량은 총 23억원 규모로 컬빙·하키·스피드 경기장 등에 들어가는 전기 관급자재다.

하지만 동계특별법에 물품 분야는 공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의 낙찰 기

회가 낮아 동계특별법에 물품도 지역할당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도내 전기업체 관계자들은 "수배전반 등 동계올림픽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품도 최소 40% 정도로 지역할당이 필요하다"며 "자칫 전국 입찰로 외지 업체들에게만 물품 공급 기회가 주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현장별로 평균 800여개... 건설사 업무부담 족쇄

‘공사대장’ 신고항목 확 줄인다

6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지자체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제동

건설공사대장의 신고항목이 크게 줄어들고 준공 전 신고의무를 알려주는 ‘사전 알리미 서비스’가 도입된다. ▶관련기사 2면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현장별로 평균 800개가량에 달하는 건설공사대장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사대장 신고항목은 건설기계·자재납품 등 하도급계약 1건당 70~80개가량으로, 규모가 큰 건설현장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건의 계약 체결에 따라 신고항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신고항목의 90% 정도를 발주자와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는 데도, 또다시 신고하도록 하



3D 프린터로 만든 건축물 3D프린팅 시장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알아볼 수 있는 ‘인사이드 3D프린팅 콘퍼런스 및 엑스포’가 2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관람객들이 3D프린팅 건축모형 제작업체인 플레이플랜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면서 건설사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전국 8만개 현장에 대한 규제비용도 연간 1600억원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존치할 필요가 있는 큰 항목만 남기는 방향으로 신고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고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건설공사대장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시공 중에 건설공사대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지지만 준공 후 미신고에 대해선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모바일 등을 이용한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2면에 계속

건축허가 협의때 15일내 의견 안내면 '협의완료' 간주

인허가·협의 간주제 확대 신고제도 합리적 개선

A씨는 3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건축허가 때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인허가가 다른 기관과 협의되지 않아 처리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애가 탄 A씨는 언제까지 처리되는지 재차 물었지만 협의기관이 많으며 일단 기다려 보라는 얘기만 돌아왔다.

정부가 22일 개최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인허가 제도를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다른 기관과의 협이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처리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간주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협의간주제는 건축허가(15일)를 비롯해 해안권·내륙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30일), 물류시설 공사시행의 인가(20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20일), 새만금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20일), 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20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15일),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20일) 등 28개 복합민원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다른 법률의 여러 인허가가 얽히고설켜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복합민원의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가 등의 민원 처리사무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된 인허가간주제도 확대된다.

인허가간주제는 처리 기한 내 인허가 여부나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14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20일),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20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20일), 산지 전용허가(30일), 채석단지 지정(60일) 등 62개 인허가 제도에 추가 도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연 사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인허가 투명화 방안도 논의됐다.

인허가 투명화 방안은 근로시간 연장 인가(3일),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7일) 등 11개 인허가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혼재돼 있어 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건축 신고와 같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간주제를 도입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간주제 확대와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 내 조치사항은 3개월 내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